

# 복지국가 와 혁신운동

-핀란드 사회의 경험을 살펴 보며-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산업화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

- 급격한 생산력 성장
- 급격한 도시화와 노동시장의 발달
- 심각한 사회문제: 도시빈곤-주거, 생존, 보건, 의료
- 소득불평등
-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 제급갈등
- 돈에 대한 광기 이후의 고요한 삶의 대한 향수와 중요성의 발전
- 사회전반의 배고픔이 없어진 후의 다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 민주화 이후 대의제 민주정치의 확립

- 공민적 시민권 (civic right)
- 정치적 시민권 (political right)
- 사회적 시민권
- 대의제 민주주의의 확립: 다수결주의 / 비례대표제 | 대통령중심제 의회중심제
- 민주주의의 이상: 자유, 평등, 공화정
- 정의론과 복지국가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복지국가란 그 시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을 책임지는 국가’ (48쪽 에스핑-앤더슨이 비판한 정의)

에스핑-앤더슨의 주장: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나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탈상품화와 탈제층화를 지지하는 것

- 복지국가와 삶의 가능한 위험과 기본적 필요의 공유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

##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노력’
-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1) 초기배분-재산권
- (2) 분업과 거래 및 교환
- (3) 자본의 강력한 자원, 권력 및 문화 등이 동원력과 지배력-위계적 질서
- 시장경제의 문제?
- (1) 효율성의 문제-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비대칭
- (2) 초기배분의 문제-불균등한 초기배분을 교정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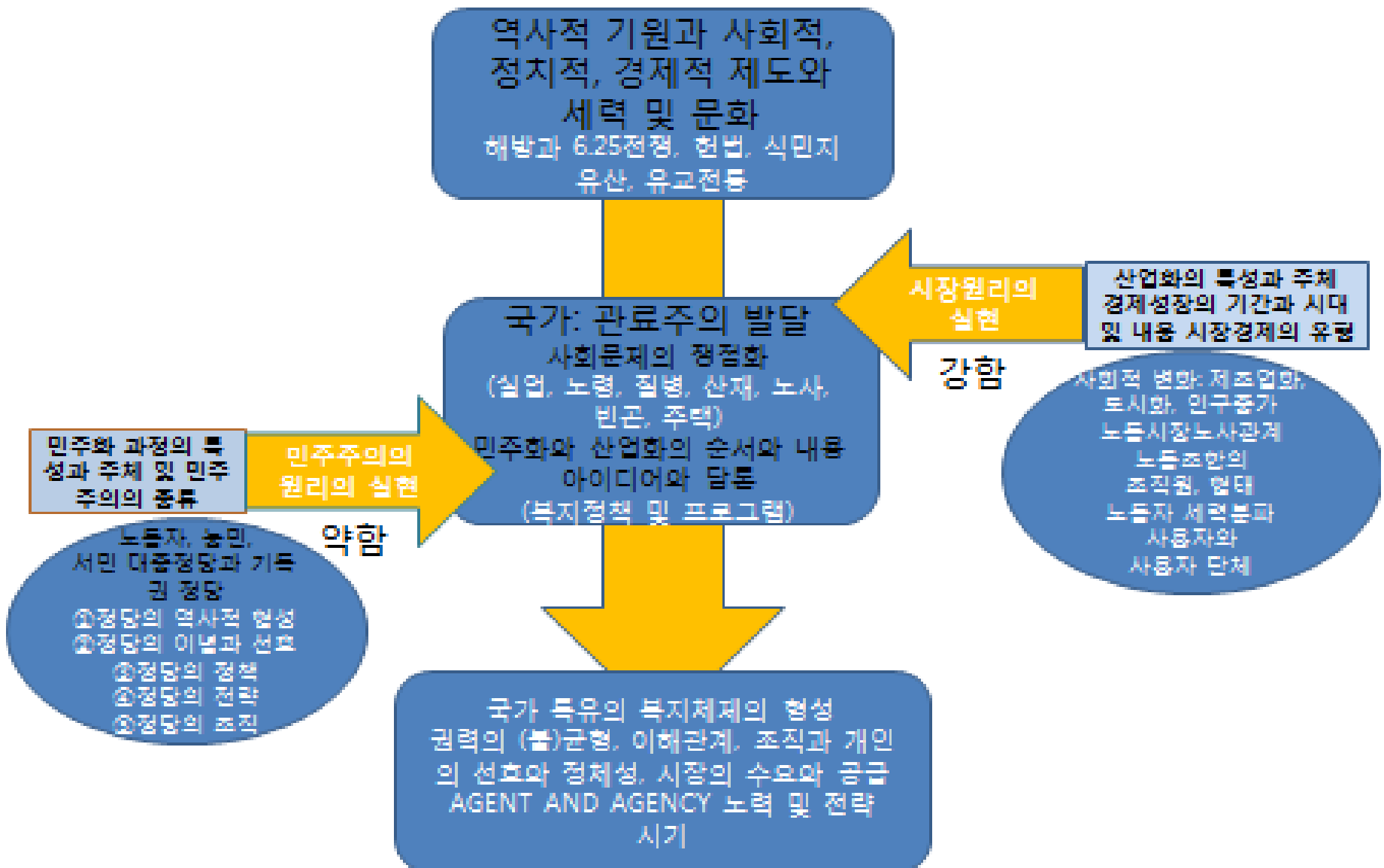
- 민주주의란 그 이상은?
- (1) 자유: 평등과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기 삶의 주인, 자주권
- (2) 평등: 여러 관점의 평등
- (3) 공화정 및 공화주의: 정치공동체와 그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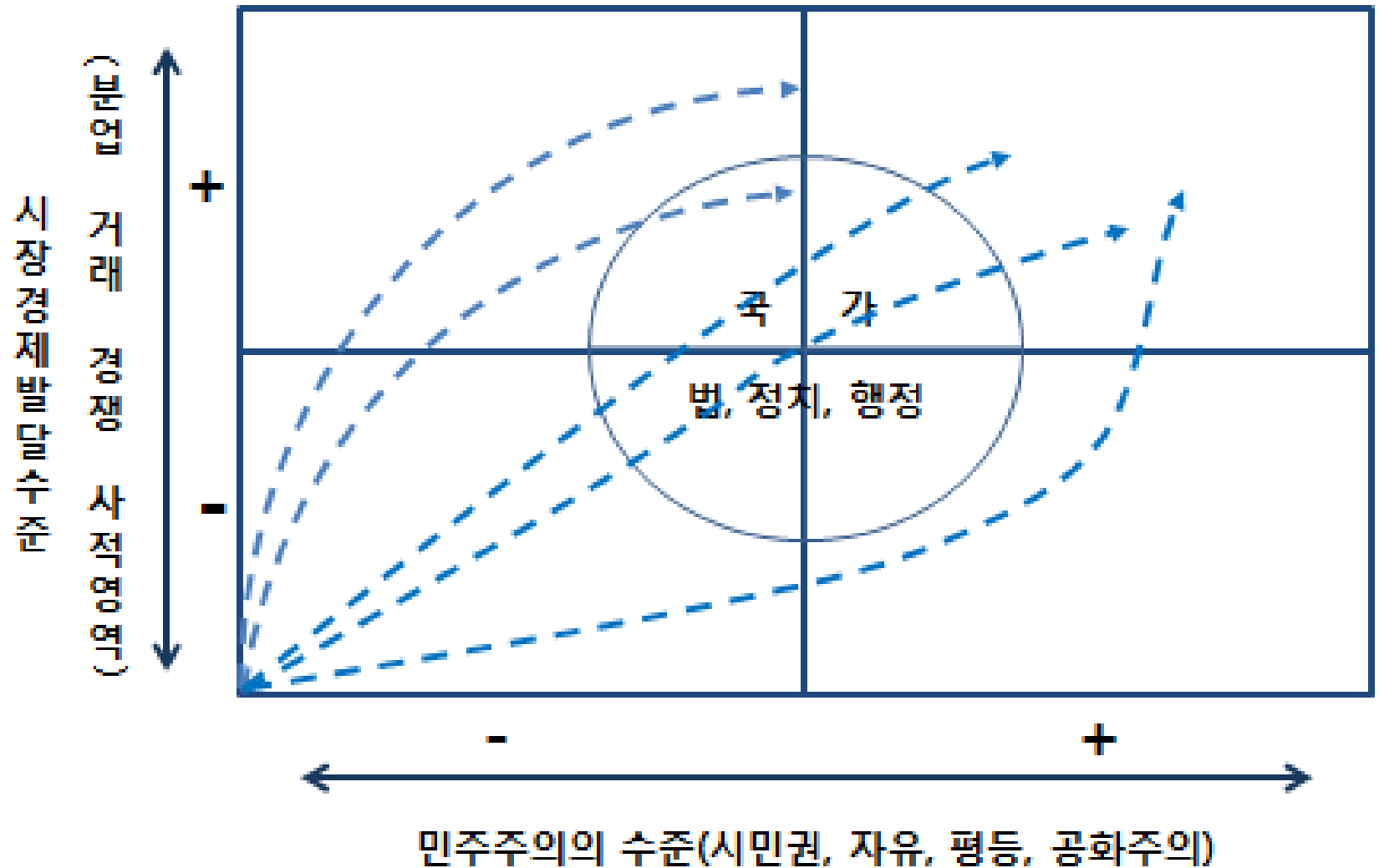
- 민주주의 그 현실은?
- 대의제 민주주의
- 시민의 역량과 조건
- Capability와 기능성
- 정당과 정치인
- 시민
- 시민사회의 조직: 노동조합, 교회

#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 민주화를 통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확립
  - 관료제의 발달과 국민국가 건설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 
- 산업화의 방식 및 전략 그리고 주도세력(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관료)
  - 민주화의 방식과 주도세력과 전략(중산층, 농민, 노동자, 학생)
  - 민주화, 산업화, 관료체제의 발전경로, 기간 및 순서

# 복지국가의 제도형성





- ① 각국의 정치 비교분석
- ② 각국의 역사경로(산업화, 민족화 VS 서비스 경제화, 민주화 이후 사회적 민주화)
- ③ 각 영역별 특성과 제도

민주주의 원리	
자유	소극적 자유 + 권리
	적극적 자유 + 권리
	조직 내부 자유 + 권리
	조직 선택 자유 + 권리
평등	본질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공화주의	대의 투표 제도
	직접 참여제도
	합의제와 다수결주의

국가
헌법
법체계
행정 및 관료체계 대통령 중심 vs 내각 중심
의회: 비례 ⇄ 다수결
사법
⇄이념 아이디어 담론⇄ ↑ ↓
원리의 제도화: 정책수립 법 집행
시장원리 적용영역 쟁점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택, 실업 노령 등 위험대비, 재분배)
민주적 가치와 시민 대표성 실현 문제
정당 또는 정치적 대표자

시장원리
재산권과 초기배분
기업과 개인의 선택 자유
기업과 개인의 존재와 목적
분업거래, 교환의 법칙
시장의 배분적, 기술적 효율성과 생산성
생산성, 경쟁 및 적자생존

선택 및 민영화

기업의 위계질서

경영주의

원리의 제도화의 힘

투표 ↑ ↓ 여론 운동

연대:  
연결하는  
시민사회(예:  
산별 노동조합,  
환경단체)

결속:  
통일하는  
시민사회(예:  
계급, 종족,  
종교, 지역,  
노동조합)

아이디어, 정책담론,  
공론화, 의제설정

시민사회와 시장사회의  
조직  
법령 관행 습관 담화

시장 사회  
기업

고용주-고용주  
협회  
각종 이익단체  
각종 상거래  
관계

↑ ↓

민주주의 원리

공감과 연대

소통과 대화

시민조직

갈등

투쟁

시민  
사회

개인(가계)

사회(선호 및 가치, 권력과  
영향력, 이익과 이해 관계

및 유인 구조)선호

시장과 민주주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생산과 배분

에 대한 가치 기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  
인식

권력과 자신의 힘에 대한  
구성된 인식

사적 관계

시장원리 지배

초기배분(유산과  
운)

자원과 권력

탈 인격적

경쟁

기업

시장  
사회

# 복지서비스의 원리

불평 등의 기원 (자연조건-운과 유전자, 노력, 결과)

## 보편적 복지원리

- 권리에 기초한
- 내용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
- 행정비용
- 사회적 연대

## 선별적 복지원리

- 자격(자산, 소득, 친척)에 기초한
- 내용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
- 행정비용
- 사회적 차이

Rothstein(1998)은 복지의 도덕적 논리로 일반적 공정성(general fairness)으로서의 실체적 정의(substan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제시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동등한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대우해야 하며, 사회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난한 자’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심과 존중의 원리에 따라 기본적인 역량(basic capabilities)를 갖추도록 하여 개인들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역량은 시대와 나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정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포함하여 정치론 담론에 자유롭고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논리와 일치한다.

Rothstein(1998)에 따르면 선별적 복지정책은 이러한 기본역량이 없는 시민들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선별하는 과정은 모든 시민을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갖고 대우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 분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은 곧 그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의 표를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회정책은 수혜자의 자아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낙인 문제와 함께 선별된 그룹에 대한 복지는 곧 일반적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하는 기준의 애매모호함, 수혜대상자의 자기 책임 문제에 따른 수혜 합법성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대중의 동의를 오히려 받기 힘들게 된다. 이것은 이들 수혜 대상 시민들을 보통의 시민들로부터 분리하는 데서 오는 일반적 정의의 위반 때문에 생긴다. 이에 비하여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역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등한 존중과 관심’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평등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로서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교육, 건강 및 연금 등)가 되며 일반적 관점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복지 정책은 절차적 정의에도 문제가 되는데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자산 및 소득 조사 등과 기타 복지 수혜를 위한 집행비용, 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관료의 권력남용 등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복지의 합법성 논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보편적 복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 체제에서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othstein 1998).

# 세 가지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세계 에스핑 앤더슨 (1990)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자유주의 복지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 상품화와 제층화의 기준

자유주의 복지국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의 탈 상품화를 최소화하며 (시장을 극대화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 복지에 의존하는 '평등한 빈곤'을 보장받는 제층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제층을 나누는 제층화 체제를 지지한다.

조합주의적 보수적 복지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시장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집착'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산업 사회에서 나타난 계급적 계층적 지위의 격차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하며 가족을 강조하고 여성을 배제한다.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등은 국가와 시장의 이중구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중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보편주의 단일 보험체제를 적용하여 상품화를 최소화하고 계층을 평등화하는데 기여한다. 시장위험을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족에게 맡기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해결한다

## 탄생하는 복지국가들: 아시아, 동유럽

-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급속한 시장경제의 발달
-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 시민사회의 저성장-노동조합 및 협동조합의 성장이 낮다.
- 사회 민주주의 등의 정당의 다양성 결여
- 가치와 규범의 개인과 가족 책임주의

	CME PR	CME PR / CD	LME Majoritarian
	사회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주의
돌봄 혹은 유아교육 Day care or preschool	높음	낮음	낮음 (민간 투자는 많음)
초, 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높음	보통	보통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높음	보통	보통 (민간 투자는 많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높음	낮음	낮음
직업훈련 Vocational	높음	높음	낮음

# 민주주의 보편 복지

협력적 시장경제

비례대표 합의제 민주주의

기독민주당 부재

민주주의  
연대  
보편주의  
사회적 정의  
시장 통제

사민당 주도의 민주정치연합  
(노동자와 농민 연맹, 중산층 포함)

보편적 민주주의 복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효과적인 재분배  
사회투자 수준의 향상

교육투자 증대  
효율적 기업 및 산업 특수적 숙련체제  
효율적 일반 숙련체제 :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통합형 기초교육 및 양질의 직업교육  
School to Work 체제의 제도화

비교우위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  
근속 안정  
저축산 방지

# 조합주의 기여 복지

협력적 시장경제

비례대표 합의제 민주주의

강한 기독교민주당

조합주의  
엘리트주의, 보호주의  
하층계급에 대한 시혜

국가, 관료, 사용자, 고숙련 노동자  
중산층 및 기독교 사민당 중심 정치연합

시장기여에 기반한 조합주의적 복지  
여성 및 비숙련 노동자 배제  
내부자 중심, 외부자 최소보장

재분배의 효과성(+,-)  
사회 투자의 저하(+,-)

중간 수준의 교육투자  
기업 및 산업 중심의 특수적 숙련  
(기업, 노동조합의 중심적 역할)  
내부자의 효율적 숙련  
학교의 이중 체계 및 도제 교육  
School to Work 체제의 제도화

비교우위, 생산성, 성장률 하락  
고용안정성에 최우선  
저출산

# 시장주의 선별 복지

자유시장경제

다수결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 논리  
개인적 자유주의  
보수적 공동체주의  
경쟁 강조  
사회 안전망 강조

보수정당, 양당제  
중위자 투표  
중산층 중심

대상 집단(targeted group)에 대한 선별적 복지  
사회적 낙인  
복지의 합법성 훼손  
(모럴 해저드, 관료의 권한 오남용 등)

소극적 재분배  
낮은 사회투자수준

전문가의 고숙련 비교우위로 인한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질 낮은) 일자리 증가  
고용, 소득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전문가 중심의 지식 창출  
하위 계층의 질 낮은 일반적 숙련  
교육에 대한 개인 투자  
기업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재

# 한국형 복지 지형

국가-대기업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다수결 민주주의

경쟁 및 시장주의  
성장우선주의  
VS

평등주의 및 사회 정의  
분배 선호

보수파 우세 정치지형  
진보주의 진전  
광범위한 민주주의 지지  
(민주화 운동 경험)

복지 제도 기반 형성 단계  
시장주의 선별복지 및 부분적 기여복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복지 원리 및 정책 경합 활발

소극적 재분배: 빈곤대책  
미흡한 사회투자

낮은 수준의 공공 교육투자  
(초등교육 이전, 고등교육 단계)  
비효율적 계층화 된 일반적 숙련 체계  
통합된 기초교육 및 부실한 직업교육  
School to Work 체제의 비제도화

대기업 중심의 국제경쟁력  
노동시장 유연화 국제경쟁력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층화 및 양극화  
고용 및 소득 불안, 저출산

# 복지국가를 위한 운동과 제도화의 힘-사회와 국가

## 1.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혁운동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노력'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통한 시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구성원의 동등한 중요성, 동일한 존중과 배려  
-교환과 거래의 시장영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력과 과제를 안고 있다.

- (1) 민주주의 학교(시민사회조직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종결전 지역 사회의 자본 독점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훈련 결정적인 역할
- (2) 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원주의 민주주의 내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제기-정당 총합
- (3)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중간체제로서 북유럽의 협동조합운동
- (4) 기업화와 대안경제

## 2. 시민사회운동

- (1) 교육 및 문화-가치와 합법성 문화의 변화
- (2) 공공영역에 대한 감시와 주민의 정책적 요구를 대변
- (3) 회원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 (4) 대중 속에 있는 시민사회-교회, 협회, 동창회 등과 관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5)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의 역할-생산자 조합과 소비자 조합으로 충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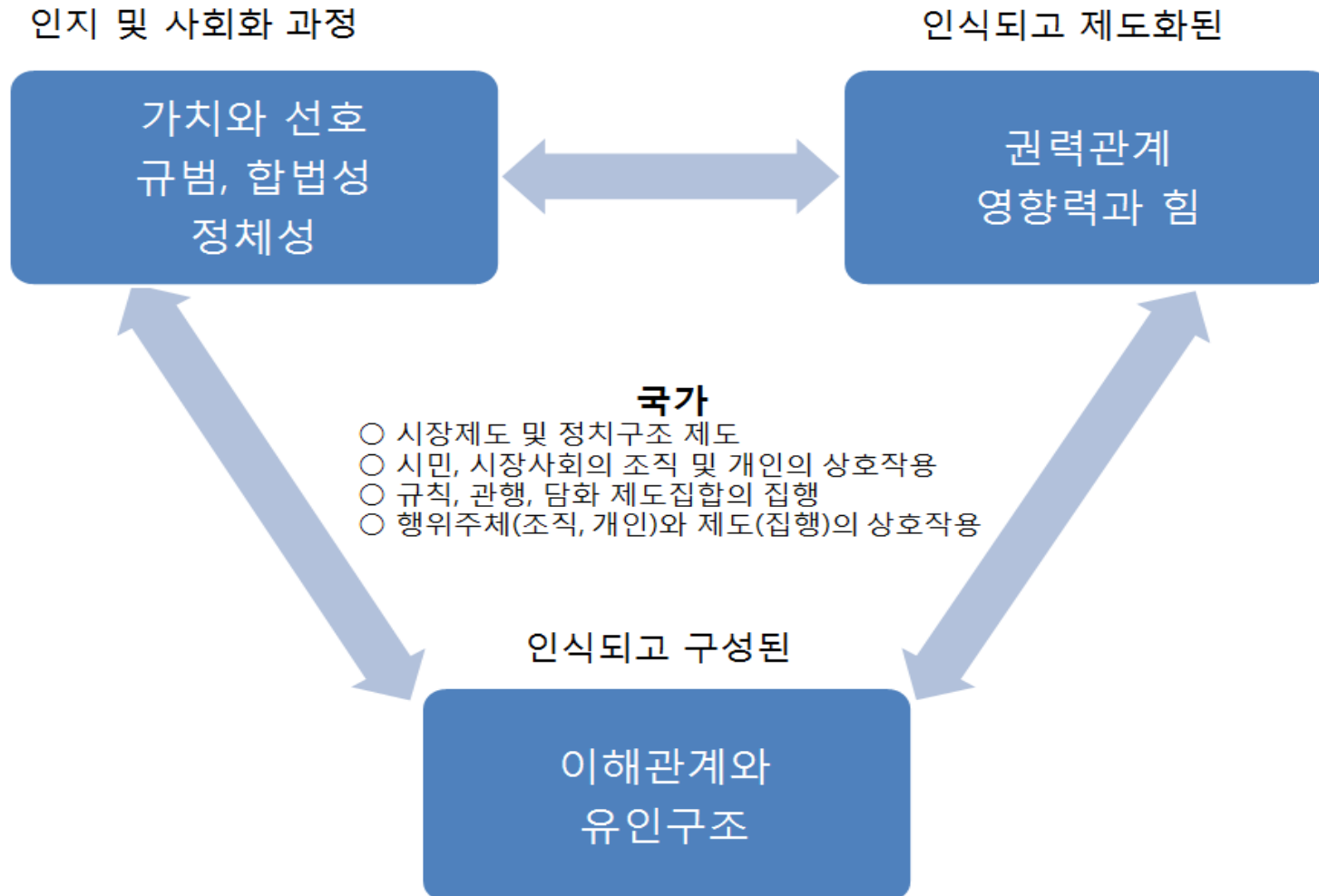
### 3. 정당과 운동

- 정치운동의 결정-정당-정치권력을 위임 받을 수 있는 조직체
- 이념과 담론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기
- 책임감, 신뢰, 역량
- 대중과의 밀접한 직접적 관계-일상적인 만남과 선거를 통한 만남.
- 민주주의 학교와 훈련이다.
- 운동의 역사다. 흐름이다. 쉽지 않다.
- 비난과 비판을 쉬운데 개선을 어렵다.

## 4. 국가

- 다양한 시민사회의 견고한 복지지지
- 정치연합을 통한 정치 권력이 복지국가를 Big Push 할 수 있도록 장기간 집권
- 권력관계의 변화를 통해
- 가치 규범 선호의 변화
- 이익과 이해관계의 장기적 변화를 정착하면 새로운 경로를 창출한다.
-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역할-Barcelona.
- 시민사회, 지방정부, 영역(교육), 시민적 공간, 등을 활용

#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혁신운동과 운동혁신

- 가치와 규범, 선호와 취향, 합법성과 정당성의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화두, 담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등을 민주적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제도(비례대표), 합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
- 종국적으로는 구성된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개인들은 가치와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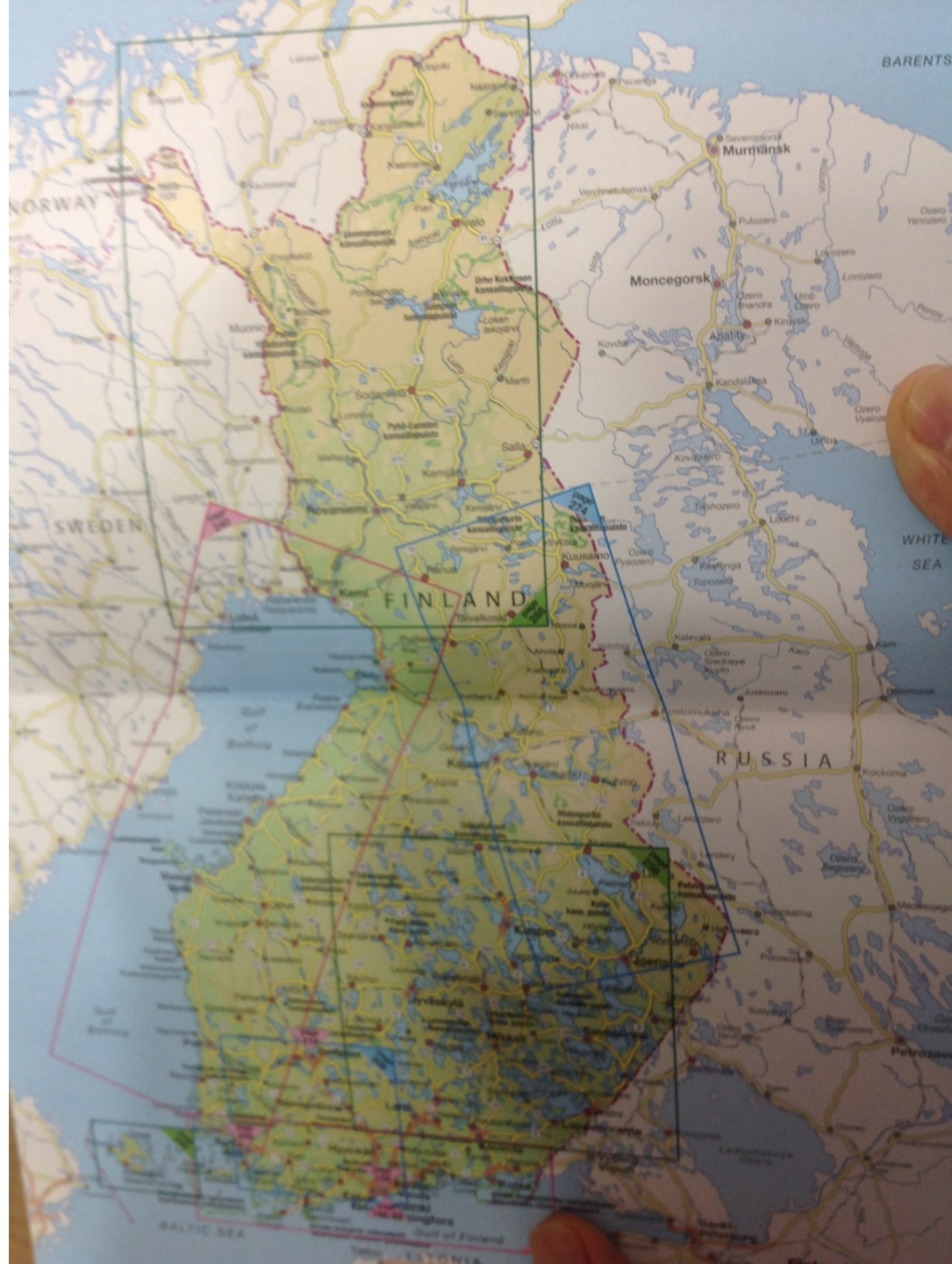
		목표제도의 속성	
		해석과 실행에 있어 낮은 수준의 재량권	해석과 실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정치적 맥락의 속성	강한 거부 가능성	접치기	방치
	약한 거부 가능성	대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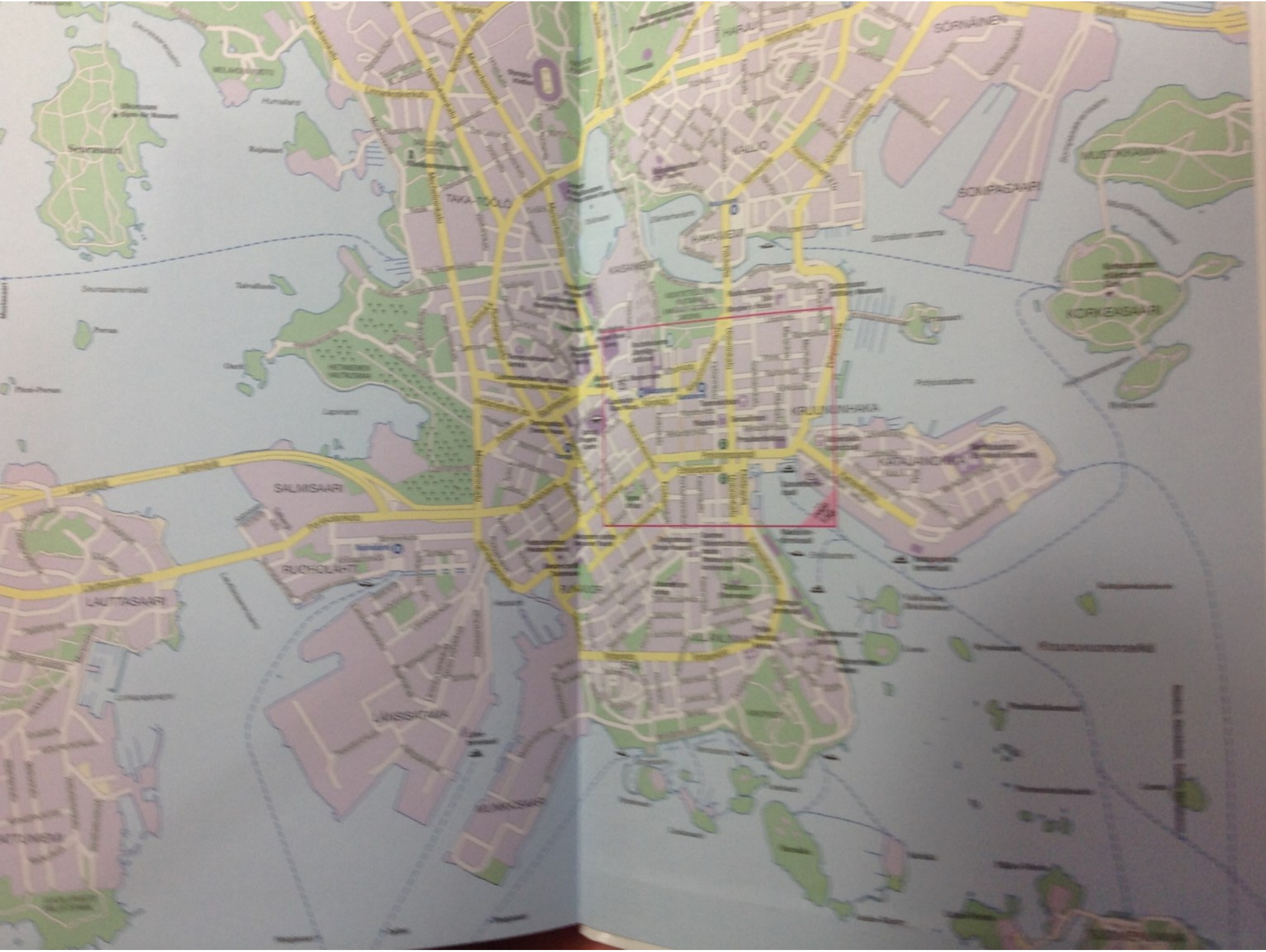
# 복지 국가의 도전

- 사실상 멈추어 버린 성장(고령화, 실업, 등)
  - 벌어지는 불평등
  - 경제의 서비스화+탈산업화+일자리의 감소+불안정
  - 복지수요의 증대와 재정의 제한(조세수입의 한계)
- 
- 복지의 주체는? 복지 서비스의 공급 방식
  - 개인-자선가+선한 기업가
  - 가족
  - 교회
  - 국가
  - 시민사회
  - 시장사회

# 핀란드 사례: 빈곤에서 복지의 나라, 인류의 비극을 피하고 민주적 나라

- 파시즘
- 사회주의 전체주의
- 시장 근본주의
- 그러나 좌우익 내전을 피하지 못했다
- 내전을 통합의 희망으로 가져갔다.
- 
-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 민주주의를 통한 시장에 대한 통제
- 복지과 시장이 잘 결합된 나라
- 평등, 인권, 교육, 평화, 인류를 위해서 여기는 나라







# 핀란드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요약

	핀란드(소국: 인구 560만명)	한국(중간 규모: 5000만명)
경제	조정경제(국가, 기업 및 노동)-국가 주도성  대기업 중심: 노키아/대외의존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국가 주도하는 분절 시장  재벌 대기업의 GDP의 몫 /대외의존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민주주의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  의회와 대통령제의 혼합	다수결 위주의 민주주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지역 분할된 정당정치
주요정당	사민당, 중앙당(구농민), 보수당, 공산당 좌파	보수적 양당체제
사회	높은 수준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수준,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	낮은 수준의 기업별 노동조합/낮은 수준 협동조합 과 시민사회 조직
민주화	1918년 국가 건설과 함께	1987년 이후 본격화
산업화	국가 창설이전 부분적 산업화 이후 압축적 성장	독립이전 부분적 산업화 이후 압축적 성장
복지의 수준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높은 수준의 선별복지
고용 및 실업보호	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대기업과 공공분야의 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고용 보호/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고용 보호 낮은 실업보호

- 가난했던 나라
- 좌우 내전이 있었던 나라
- 세계전쟁에 휘말린 나라
- 강대국에 영향력에도 독립을 지킨 나라
- 나라(독립)한지 100도 되지 않는 나라
- 압축적 경제성장
- 민주주의 수준과 복지의 수준

## 북유럽 국가의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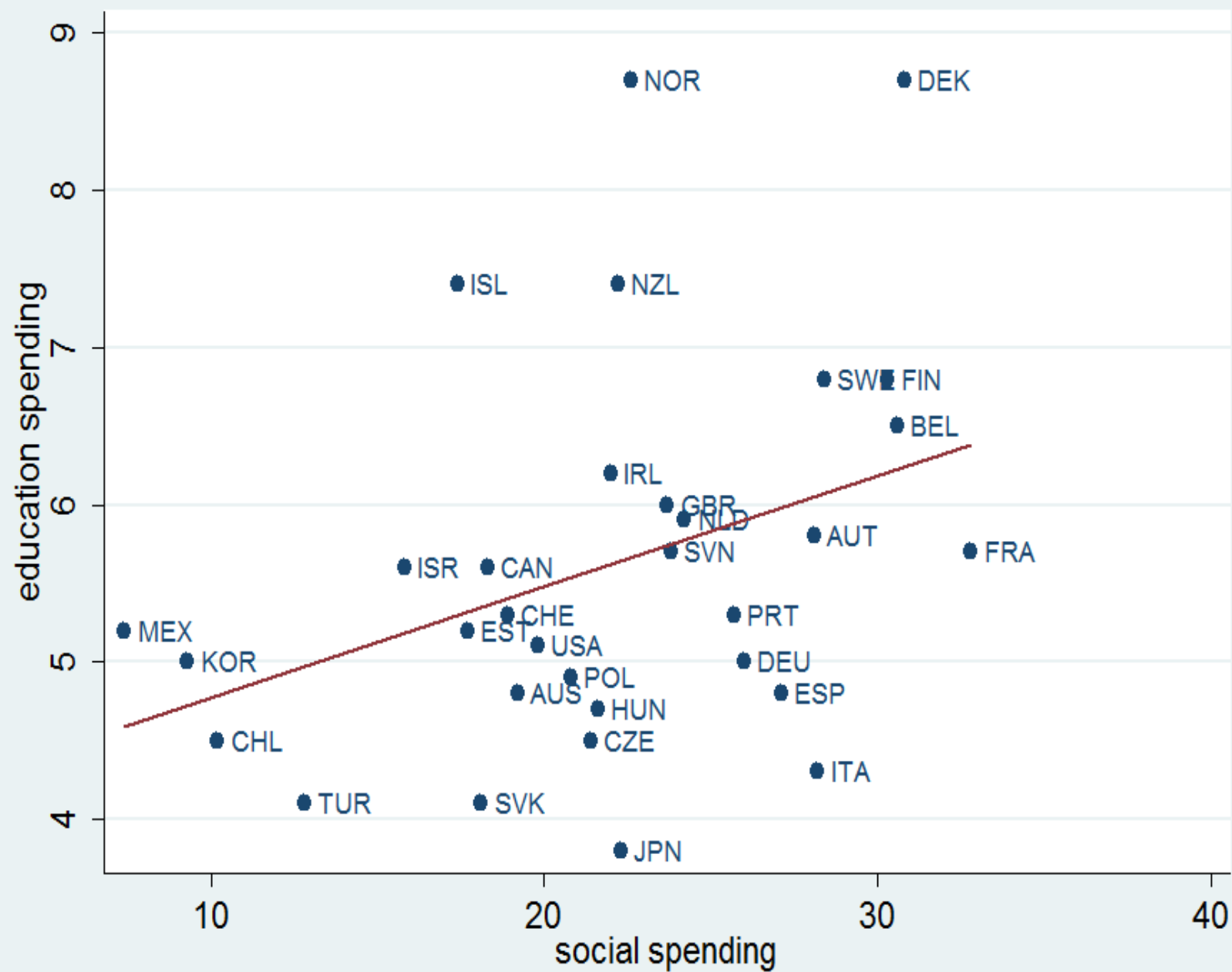
	1870-1913	1913-50	1950-73	1973-2001
Denmark	2.66	2.55	3.81	2.06
Finland	2.74	2.69	4.94	2.57
Norway	2.12	2.93	4.06	3.30
Sweden	2.17	2.74	3.73	1.83
12 country average*	2.13	1.16	4.65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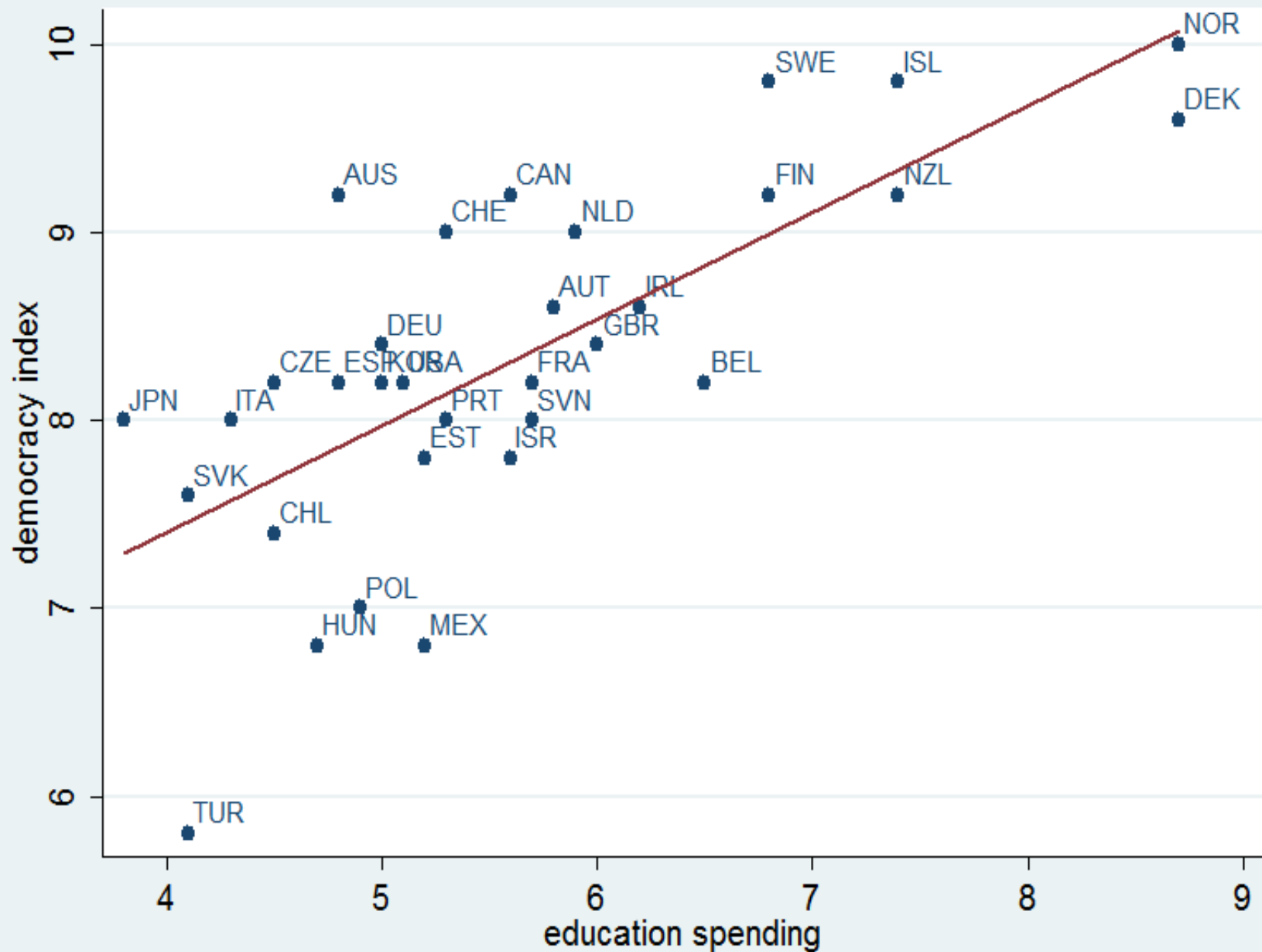
\* Twelve countries: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Switzerland, United Kingdom, and the four Nordic countries. For the Period 1913-50, only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recorded higher growth rates than the Nordic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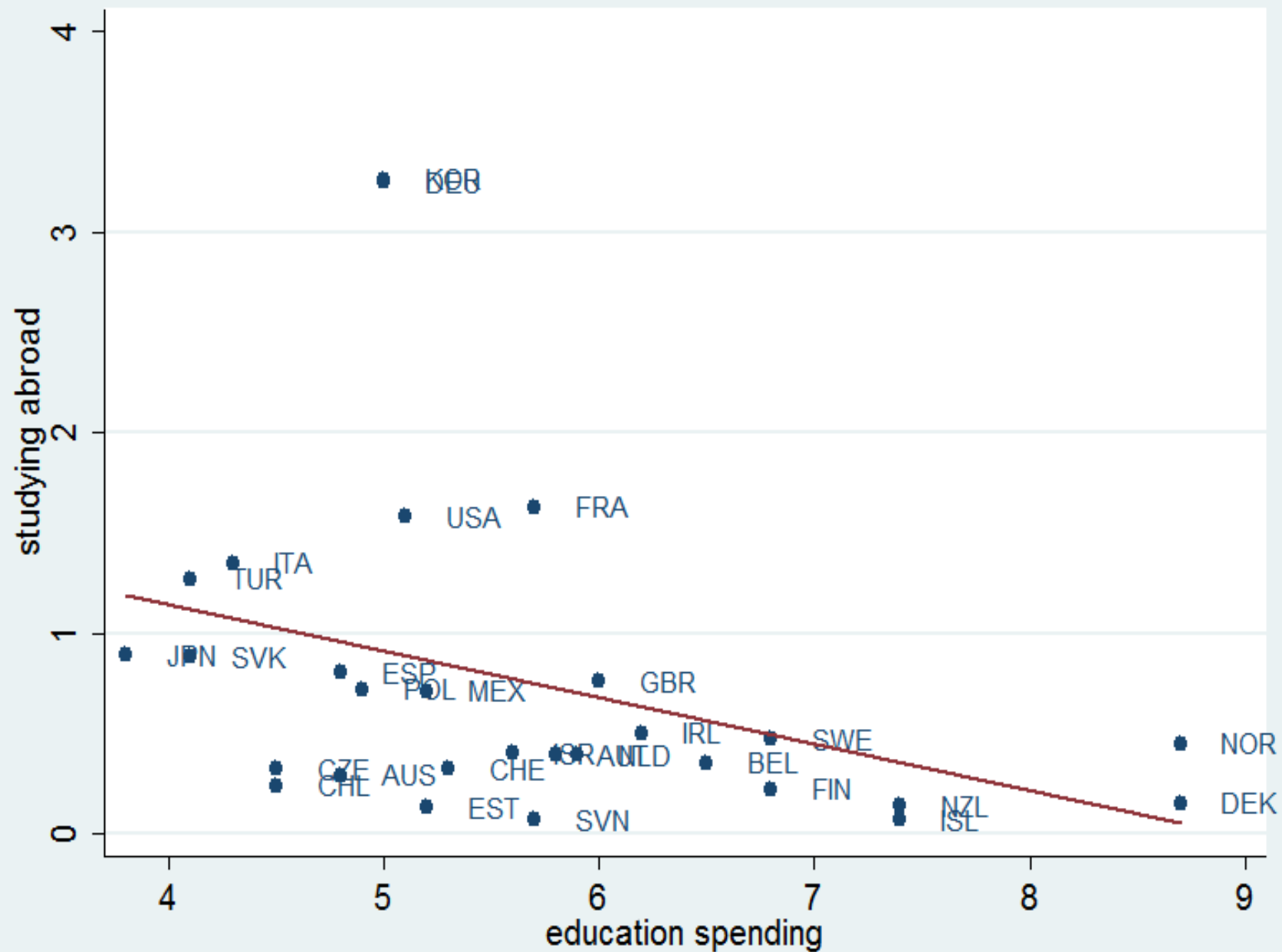
Source: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2003), p. 260

# 산업분야별 고용비율

	한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1	19.86	70.18	18.02	78.75	19.89	74.5	14.47	77.36	14.14	81.96
2002	19.21	71.46	17.09	79.82	19.68	75.01	14.01	78.34	14.17	82.06
2003	19.07	72.12	16.6	80.36	18.83	76.1	18.83	76.1	13.66	82.68
2004	19.09	72.82	16.14	80.77	18.43	76.67	-	80	13.05	83.48
2005	18.6	73.46	-	80.46	18.26	76.99	-	80.63	13.11	83.62
2006	18.08	79.24	15.57	81.31	18.17	77.21	11.76	82.35	13	83.66
2007	17.65	83.87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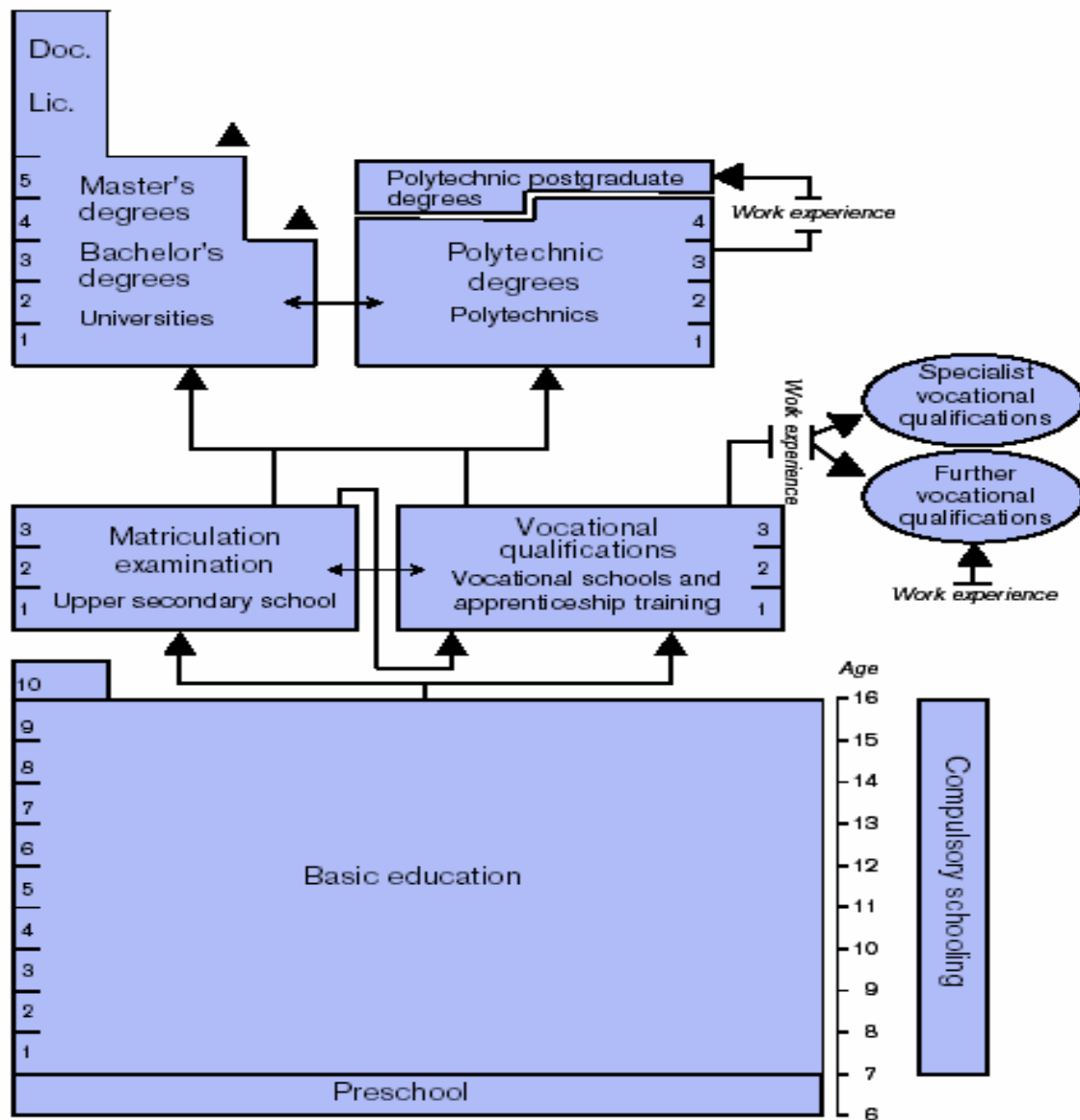






# 핀란드 학교와 교육

- 중요한 교육: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
- 짧은 교육 시간
- 충분한 hobby 활동
- 자기 성찰
- 교사에 대한 신뢰
-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다
- 독립성
- 학비와 교통비와 생활비 보조
-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









Helsingin yliopiston Viikin normaalikoulu  
Välisarvioinnit kevät 2013

Nimi: Aarni Leikas 24.2.2013

1. lk

OPPILAAN ITSEARVIOINTI

TYÖSKENTELY JA KÄYTTÄYTYMINEN	Sopii minuun erittäin hyvin.	Sopii minuun hyvin.	Sopii minuun melko hyvin.	Sopii minuun huonosti.
Kuuntelen annettuja ohjeita ja toimin niiden mukaan.		X 0		X 0
Osaallistun opetukseen opetustuokiolla innokkaasti.		0		X
Jaksan työskennellä keskittyneesti opetustuokiolla.	X 0	X 0		
Huolehdin kotitehtävistäni.			X	
Huolehdin tavaroistani.	0			
Osaan työskennellä yksin.		X 0		
Osaan työskennellä ryhmässä ja parin kanssa.	X 0			
Käyttyädyin kohteliaasti ja ystävällisesti koulukavereita kohtaan.	X 0			
Käyttyädyin kohteliaasti ja ystävällisesti aikuisia kohtaan.	X	0		
Noudatan yhteisesti sovittuja sääntöjä.	0	X		
Pystyn selvittämään ristiriitallisia tilanteita.		X	0	
Annin työrauhan.		X 0		
Pidän huolta koulun omaisuudesta.		X 0		

Tavoitteeksi: Vältä häliemistä silloin, kun annetaan ohjeita.

OPPIAINEET Aarni

OPPIAINEET	erinomaisesti	hyvin	melko hyvin	Harjoittelen vielä.
ÄIDINKIELI JA KIRJALLISUUS	X 0			
Luen sujuvasti tavuja.	X 0	0		
Luen sanoja ja lauseita.	X 0	X 0		
Luen sujuvasti tekstiä.				
Ymmärrän lukemani.				
Käsitän on seikää.	X 0			
Käsitän saneluista viesteistä.	X 0			
Osaan kirjoittaa tekstejä.				
Osaan kirjoittaa lauseita.				
Tavoitteeksi: <u>OK.</u>				

MATEMATIIKKA	erinomaisesti	hyvin	melko hyvin	Harjoittelen vielä.
Tunnistan ja vertailen lukuja.	X 0			
Osaan laskea yhteenlaskuja.	X 0			
Osaan laskea vähennyslaskuja.	X 0			
Osaan ratkaista päässälaskuja.	X 0			
Osaan ratkaista soveltavia tehtäviä.	X 0			
Tavoitteeksi: <u>OK</u>				







# 협동조합 경제의 나라

- 국민 1인당 평균 2.1 개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나라
- 소농중심 경제에서 농민들은 4.1개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나라.
- 농업생산, 유통 및 금융부문에서 상당한 영역을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사회
- Pdf 파일 소개

- 노동조합 조직율
- 협동조합 가입율
- 가장 친구 관계를 오래 하는 사람들
- 수많은 어른 동아리
- 수많은 내기(예 낚시)

# 핀란드의 복지와 노동

- 노동조합
- 노동시간
- 여름휴가
- 노년복지
- 여성의 지위
- 엄마의 지위



















# 핀란드 교회

- 루터파 교회
- 종교세
- 목사들의 노동조합
- 교인들도 사생활
- 찾아가는 교회
- 음악의 숲



# 도시와 공간

- 자연과 어울려진 도시
- 소박한 외부
- 단아하고 아름다운 내부 디자인
- 어디가나 예술품
- 화려한 색상







# 핀란드의 자연

- 너른 평지
- 호수와 숲
- 좁고 긴 저울
- 좁고 긴 저울밤
- 참 좋은 여름









# 핀란드인들에게 국가란?

- 고통스런 과정-내전
- 시민을 지켜 낸 국가
- 우리가 지킨 국가
- 혜택을 주는 국가
-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는 국가
- 핀란드에도 부패는 있다.
- 핀란드인들도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국가

# 한국교육에 주는 합의

## 1. 학교혁신

### 1.1 학교는 시민사회다.

\*학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존중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배려

-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 존중
- 학교 사이의 평등과 다양성
- 교사들 사이의 합의 문제
- 분산되고 공유된 지도력

## 1.2 학교는 지식과 배움을 매개로 한 공동체다.

- 지식과 전통의 계승은 중요하다.
- 교사는 연구자다. 연구에 기반한 교사교육과 실천
- 학생도 배우는 연구자다.
- 학교는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이다. 29시간 대 49시간과 높은 학습역량
- 지역사회와 학부모는 협력자다.
- 학교에 맡겨라.
- 학교를 신뢰한다.

# 대학교육

- 균등한 고등교육 발전과 서열화
- 대학체제와 폴리테크닉 체제의 역할분담
- 학교 중심 산학협력과 학생들의 노동권과 인권





## 복지 국가의 화두

- 복지 대중추수주의 (populism) 때문에 나라 망한다.
  - 민주주의 때문에 나라 망한다.
  - 부정 부패 때문에 나라 망한다.
  - 불편 부당한 공정한 정부 정부
- 
- 경제성장이 더 해야 복지국가 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싫어하면, 복지국가 할 수 없다.
  - 증세 없는 복지 없다.

# 핀란드 사회의 과제와 우리의 과제

- 스마트폰 사용과 학생인권
- 민주화 복지 이후의 개인주의에 대한 대응
- 학생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무게

사회를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참여

실행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을 창조하는 것

투표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정당에 대한 당당한 요구: 언론, 시위, 서명, 결사의 자유 누리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시민사회단체 및 진실을 위한 노력 지원하기